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콜롬비아

Republic of Colombia

2021년 7월 28일 | 조사역(G3) 정동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콜롬비아

산타페데보고타



일반개황

면적 1,139천 km ² 	인구 5,036만 명 (2020)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GDP 2,715억 달러 (2020) 	1인당GDP 5,336달러 (2020) 	통화단위 Peso (Ps) 	환율(U\$기준) 3,694.85 (2020) 

- 콜롬비아는 남미 대륙 북서부에 위치하여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중남미 내 인구 3위 및 GDP 4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음. 또한, 원유, 석탄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임.
- 원자재 위주의 수출과 완성품 위주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불균형적인 교역구조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되어 있으나, 이를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과 재외국민들의 송금 유입으로 보전함.
- 2018년 8월 친시장 정책을 표방하며 출범한 두케 행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부가세 인상 및 법인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 대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히며 정치적 위기에 놓임.
- 대내적으로는 반군단체의 활동에 따른 치안 불안과 인권 탄압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코카 재배·밀수 근절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반면, 베네수엘라와는 난민 문제 등으로 갈등 관계에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3. 10 수교 (북한과는 1988. 10. 24)

주요협정 문화협정('76), 사증면제각서교환('81), 과학·기술협정('82), 무역협정('8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0), 이중과세방지협약('14), 자유무역협정('16), 운전면허상호인정·교환협정('18)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출	1,011,626	1,143,075	593,418	자동차, 전자·전기제품, 화학제품
수입	834,392	718,214	683,976	커피, 광물, 의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21. 3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59건, 336,571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f
경제성장률	1.4	2.6	3.3	-6.8	5.2
소비자물가상승률	4.3	3.2	3.5	2.5	2.1
재정수지/GDP	-2.5	-4.7	-2.5	-6.9	-8.3

자료: IMF, EIU

2021년 플러스 경제성장 회복 전망되나 대규모 집회·시위 등 위험 요인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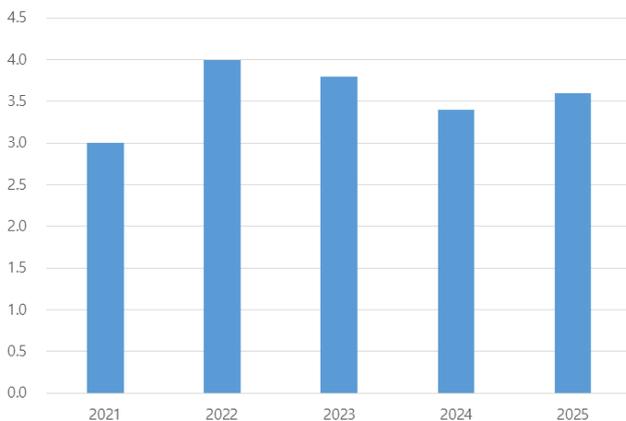
- 콜롬비아 경제는 2018~19년 원자재 수출가격 상승 및 정부의 친시장 정책 실시 등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및 투자, 수출이 대폭 둔화되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6.8%)을 시현함.
- EIU(2021. 6월)에 따르면, 2020년 콜롬비아의 민간소비, 투자,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5.6%, 20.3%, 18.3% 감소한 반면, 정부소비는 경기부양책 실시로 인해 3.7% 증가함. 2020년 4분기에는 상업 활동 및 이동 제한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면서 전분기 대비 6.0%의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3.4%)을 기록함.
- 2021년에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국, 중국, 유럽의 경제회복에 따른 대외여건 개선,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 확대 등의 영향으로 5.2%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대규모 집회 및 시위가 오랜 기간 지속된 탓에 콜롬비아 경제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
- 2021년 4월 28일 촉발된 대규모 집회 및 시위가 지속되며, 회복세를 보이던 산업들이 다시 타격을 입음. 콜롬비아 은행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 54에서 5월 46.7로 하락하였으며, 5월 자동차 판매량은 시위 및 도로 봉쇄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2.8% 감소함. 또한, 석유 생산이 지연되며 석유 부문에서 5월 중 약 2,610억 페소(약 7,00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이 발생함.
- 콜롬비아 통계청(DANE)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전국적인 시위 및 도로봉쇄 등으로 인해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11개월 중 가장 낮은 수치인 27.58을 기록함.
- 실업률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5월 역사상 가장 높은 실업률(21.4%)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으나, 금번 대규모 집회·시위의 영향으로 2021년 5월 15.6%를 기록하며 전월(15.1%) 대비 0.5%p 증가함. 특히, 시위가 가장 격렬하게 발발한 칼리(Cali) 시의 5월 실업률은 24.3%로 전월(19.9%) 대비 대폭 상승함.
-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부정적 파급효과로 총수요가 억제될 것이나, 중기적 관점에서는 양호한 소비 여력과 경제 다각화를 기반으로 3% 내외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콜롬비아 경제성장률 전망치(EIU, %) : ('22)3.8 → ('23)2.6 → ('24)3.0 → ('25)3.0

국내경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하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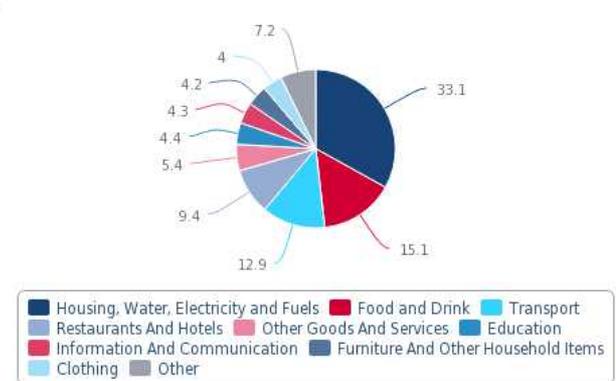
- 2019년 이후 저유가 기조 및 내수 위축에 따른 물가 하방압력이 이어졌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3.5%) 대비 1%p 하락한 2.5%를 기록함.
- 2020년 연말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를 기록하며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 (3±1%)를 하회함. 이후 경제상황 개선, 전국적인 시위 및 도로 봉쇄에 따른 공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2021년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로 목표 범위 내에 위치하였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분석됨.
-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폐쇄화 강세 및 기대인플레이션 저조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의 하반부(2~3%)에 머무를 것이며, BanRep은 이에 대응하여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EIU(2021. 6월)에 따르면, 2022년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수요 측면의 상방 압력 강화 및 국제유가 회복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를 일시적으로 상회할 것이나, BanRep의 긴축 통화정책 실시에 따라 2023~25년에는 동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21년 1월 기준 콜롬비아의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 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품목은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33.1%)이며, 식료품·비주류음료(15.1%), 교통(12.9%), 음식 및 숙박(9.4%) 등이 그 뒤를 이음. 이는 콜롬비아 경제가 전기 및 식료품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변화에 취약함을 나타냄.
- Fitch Solutions(2021. 3월)에 따르면, 엘니뇨 현상에 따른 건조한 기후에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이러한 취약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콜롬비아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단위: %)



자료: EIU

콜롬비아 소비자물가지수 구성 품목 및 가중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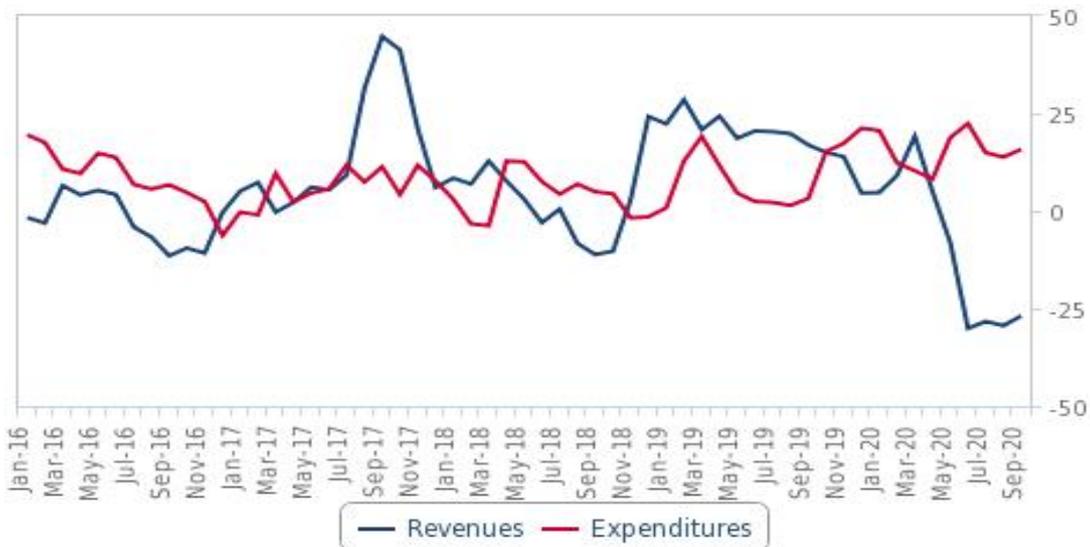
자료: 콜롬비아 통계청(DANE), Fitch Solutions. 2021년 1월 기준

국내경제

세제 개편 추진 등을 통한 공적채무 감축 노력에도 재정적자 악화 전망

- 2020년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 회복을 위한 보건예산 지출 확대, 취약계층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의 실시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6.9%로 전년(-2.5%) 대비 대폭 악화됨.
- IMF Fiscal Monitor(2021. 4월)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2020년 GDP 대비 9.8%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으며, 이 영향으로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은 전년(52.3%)보다 대폭 악화된 62.8%를 기록함.
- 2021년에는 정부 및 국회의 공적채무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수입의 느린 회복 속도, 코로나19 관련 보건지출 집행, '인그레소 솔리다리오'(Ingreso Solidario, 콜롬비아의 기본소득 사회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8.3%로 전년(-6.9%)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EIU(2021. 6월)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점진적 축소, 국제유가 회복 및 생산량 증가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2년부터 콜롬비아의 재정상태가 지속가능한 경로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두케 행정부는 조세수입 확보 및 국가신용등급 하락 방지를 위해 부가세율 인상,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나, 노동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하였음. 향후 세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재정적자 악화 및 국제금융시장과의 마찰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IMF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 실시가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의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의 향상을 위해서는 콜롬비아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의 조세 개혁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증세를 통해 정부의 조세수입을 1.5~3.5% 가량 증가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콜롬비아 정부수입(Revenues) 및 정부지출(Expenditures) 증감률 추이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Bloomberg, BanRep, Fitch Solutions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f
경 상 수 지	-10,744	-13,669	-14,508	-9,326	-10,518
경상수지/GDP	-3.5	-4.1	-4.5	-3.4	-3.6
상 품 수 지	-4,470	-5,275	-8,629	-8,017	-7,244
상 품 수 출	39,777	44,259	42,079	33,273	41,215
상 품 수 입	44,247	49,534	50,708	41,290	48,459
외 환 보 유 액	45,448	46,087	50,528	56,643	58,098
총 외 채	146,477	155,933	161,544	174,699	184,321
총외채잔액/GDP	47.0	46.7	50.0	64.4	62.4
D.S.R.	37.6	35.3	34.8	46.8	41.9

자료: IMF, EIU

불균형적인 교역구조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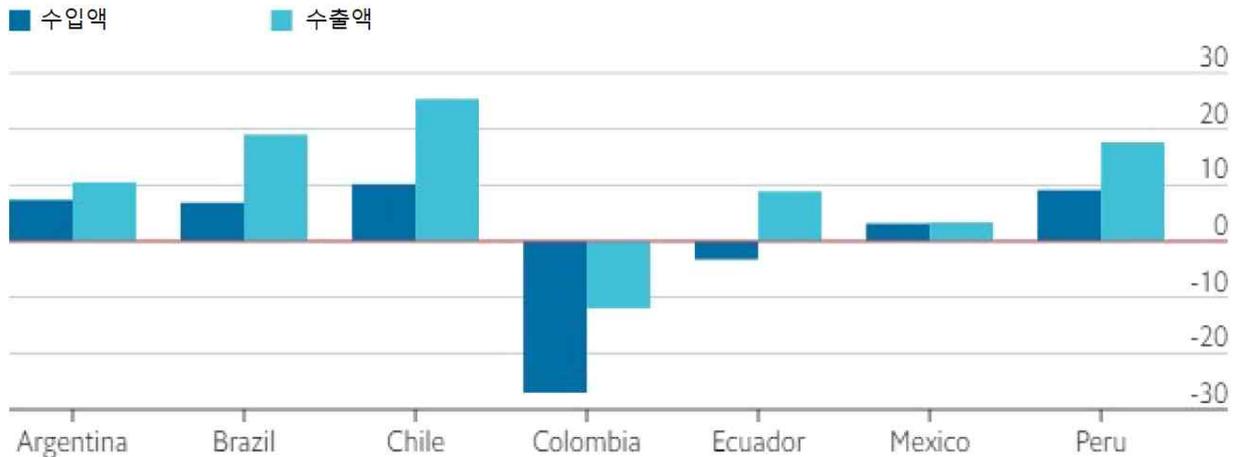
- 콜롬비아 경제는 전통적으로 원유 등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고 내구소비재 등 완제품을 수입하는 불균형적인 교역구조를 지니고 있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상태에 놓여 있음.
- 2020년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정제유 등 연료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콜롬비아의 상품수출과 상품수입은 각각 전년 대비 20.9%, 18.6% 감소함. 반면, 콜롬비아 내 다국적 기업들의 과실송금 유출액 급감으로 본원소득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45.2% 개선되었으며, 이에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4.5%) 대비 개선된 -3.4%를 기록함.
 - 콜롬비아 본원소득수지(EIU, 백만 달러) : -8,408('17) → -11,773('18) → -10,230('19) → -5,601('20)
- 2021년에는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으로 인해 상품수출과 상품수입 모두 전년 대비 호조를 보일 것이나, 4월 말 이후 발생한 전국적인 시위 및 도로봉쇄의 영향으로 그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3.4%) 대비 소폭 확대된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콜롬비아 내 다국적 기업들의 과실송금 유출액 증가로 인해 본원소득수지 적자가 재차 악화될 것이나, 이에 반해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 유입액 증가로 이전소득수지는 꾸준히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여 경상수지 측면에서 두 지표 간의 상쇄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대외거래

수출액·수입액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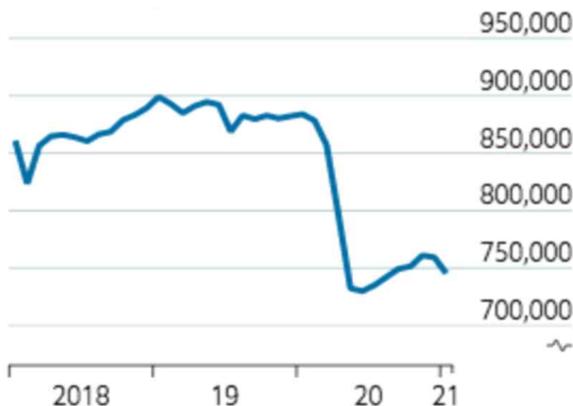
-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글로벌 무역이 큰 타격을 입은 이후, 2021년 들어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급속히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콜롬비아는 유일하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액)** 석유 및 광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콜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데 기인함. 2020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꾸준히 회복세를 보인 반면, 콜롬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2021년 1월 기준 745,247배럴/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감소함.
- **(수입액)** 전체 수입 비중의 약 77%를 차지하는 제조업 관련 품목들(일반기계, 운송장비 등)의 수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데 기인함. 콜롬비아는 2020년 전 세계에서 전 국민 자가격리 조치를 최장기간 시행·유지한 국가이며, 이 영향으로 콜롬비아 제조업의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현재는 회복 중임.

2021년 1~4월 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수출액·수입액 증감률 비교 (단위: %, 2019년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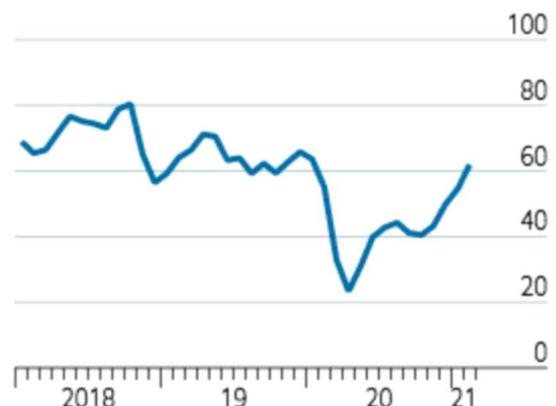
자료: EIU

콜롬비아 원유 생산량 추이 (단위: 배럴/일)



자료: EIU

브렌트유 가격 추이 (단위: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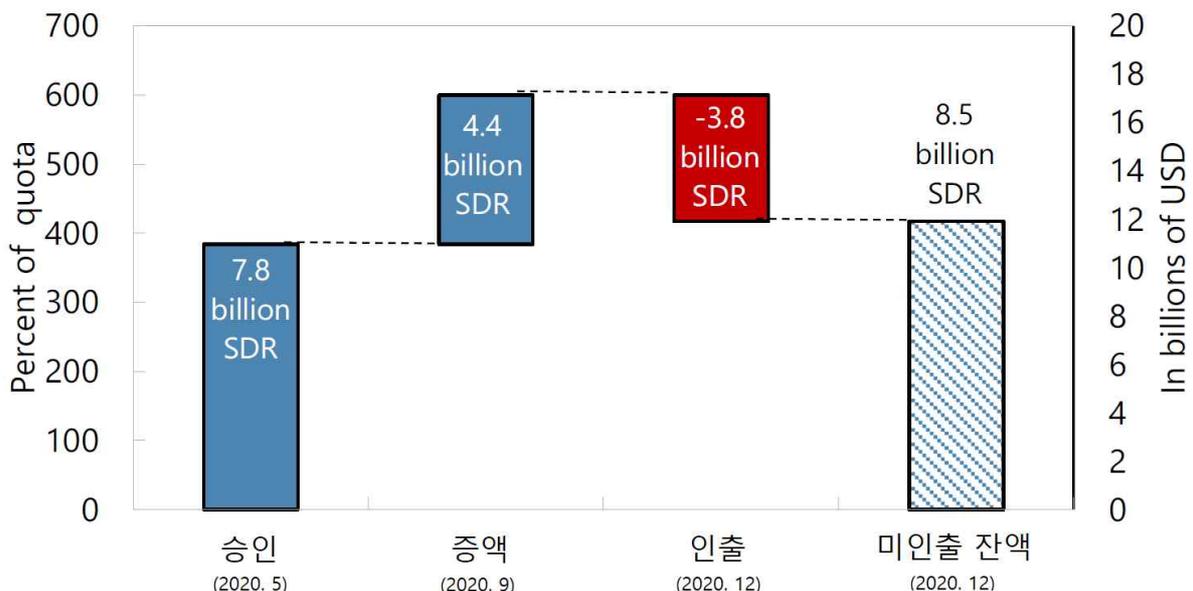
자료: EIU

외채상환능력

IMF로부터의 차입 등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확보

- 콜롬비아는 1990년대 경제자유화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FDI 유입액을 통해 상쇄해 온 국가임.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대대적인 글로벌 투자 위축으로 콜롬비아의 FDI 유입액은 전년(14,314백만 달러) 대비 46.3% 감소한 7,690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대외지급능력에 부담이 가중됨.
- 이에 두케 행정부는 2020년 5월 1일 IMF와 78억 SDR(약 107억 달러) 규모의 신축적 신용공여(Flexible Credit Line, FCL)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 25일에는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경제상황 악화,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및 위험기피 성향 강화 등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44억 SDR(약 62억 달러) 상당의 증액에 합의함. 이어 12월 2일 37.5억 SDR(약 54억 달러)을 인출하여 콜롬비아는 2009년 IMF의 FCL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FCL 자금 인출을 실행한 회원국이 됨.
- 한편, IMF(2021. 5월)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대외건전성,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용이한 접근성, 양호한 외환보유액,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콜롬비아는 2021년 5월 현재 FCL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함.
- 그 결과 2020년 콜롬비아의 외환보유액은 566.4억 달러로 전년(505.3억 달러) 대비 약 12.1% 증가하였으며, 2025년까지는 월평균수입액의 9개월분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콜롬비아의 FCL 활용 현황(2020)



자료: IMF. USD/SDR 환율은 증액일(2020. 9. 25자) 기준

외채상환능력

외채 관련 지표는 악화되었으나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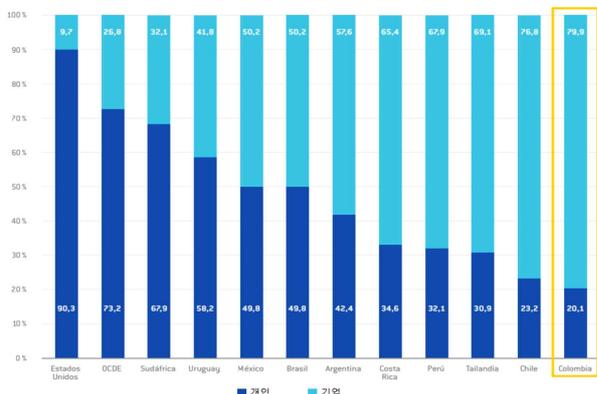
- 2020년 콜롬비아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및 이에 대응한 정부기업의 외화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대외차입이 증가한 결과 전년(50.0%) 대비 급증한 64.4%를 기록하였으며, D.S.R. 역시 총수출 급감(-27.1%)의 영향으로 전년(34.8%) 대비 대폭 증가한 46.8%를 기록함.
- IMF(2021. 5월)의 외채지속가능성 분석 결과, 2020년 콜롬비아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증가(14.4%p)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물가·환율 변동(4.5%p), 마이너스 경제성장(4.1%p), 명목이자율(2.4%p) 순임.
- 2021년에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총수출 증가 및 경제성장 회복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62.4%로, D.S.R.은 41.9%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IMF(2021. 5월)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양호한 외환보유액과 안정적인 변동환율제 등을 고려했을 때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향후 관리 가능한(manageable)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 콜롬비아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전망치(IMF, %) : ('21) 62.4 → ('22) 61.9 → ('23) 61.1 → ('24) 60.2
→ ('25) 59.2 → ('26) 58.3

구조적취약성

취약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수출구조 다변화 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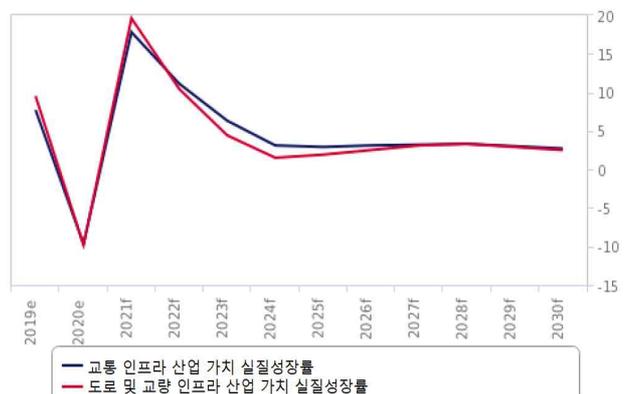
- 콜롬비아 경제는 미국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로 인해 미국의 거시경제 변화에 민감하며, 최근에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의 상품수입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Trade Map, DANE 및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2020년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30.4%), 중국(8.6%), 파나마(4.9%), 에콰도르(4.7%), 브라질(4.1%)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미국(24.5%), 중국(23.9%), 멕시코(6.7%), 브라질(5.6%), 독일(3.8%) 등임.
- UN Comtrade 및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콜롬비아의 소비자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3%로 2017년(16.4%) 대비 약 4%p 증가한 반면, 미국의 점유율은 13.0%로 2017년(14.4%) 대비 소폭 감소함.
- 또한, 원유 등 원자재 및 1차 산업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 및 원자재 국제가격의 변동에 취약한 구조임.
- SICEX 및 KOTRA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21.0%), 유연탄(13.5%), 커피원두(6.4%) 금(5.9%)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통신기기(3.4%), 옥수수(2.7%), 자동차용 휘발유(2.1%) 등임.
- 이처럼 수출대상국과 수출품목의 편중은 제조업 투자 증진 노력에도 재정수입의 높은 법인세 의존도, 취약한 교통·도로 인프라 등으로 인해 해소되기 어려움에 따라, 두케 행정부의 세제개편, 4G 프로그램(2022년 완공 예정) 등 인프라 프로젝트들의 성공 여부가 향후 성공적인 수출다각화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OECD 및 콜롬비아 민간경쟁력위원회(CPC)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콜롬비아 기업의 직접세 부담 기여도는 79.9%로 OECD 및 주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함. 이에 두케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반발로 개편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철도 효율성(99/141위), 도로 인프라 품질(104/141위) 측면에서 취약하여 제조업 다각화에 걸림돌로 작용함.

주요 국가 직접세 부담 기여도(개인·기업) 비교 (단위 : %)



자료: OECD, 콜롬비아 민간경쟁력위원회(CPC)

콜롬비아의 인프라 산업 가치 성장률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자료: National Sources, Fitch Solutions

성장잠재력

풍부한 내수시장 및 노동시장을 보유한 자원부국

- 콜롬비아는 원유, 금, 구리, 니켈, 에메랄드 등 다양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 중 인구 3위 및 GDP 4위의 비교적 큰 내수시장을 확보한 국가임.
- KOTRA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화훼 수출 세계 2위, 커피 수출 세계 3위 및 원유 수출 세계 18위(생산 22위) 국가임.
- 또한,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편에 속하여 생산가능인구가 많으며, 남녀 모두 노동참여율이 양호한 편으로, 저숙련 노동공급 측면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전문성이 높은 고숙련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 고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막중한 점 등은 취약점임.
- Fitch Solutions에 따르면, 2020년 콜롬비아 총인구 중 '20~39세' 비중이 32.7%로 가장 크며, '19세 이하'(30.5%), '40~64세'(27.7%), '65세 이상'(9.1%) 순으로 뒤를 이음.

시장 친화적인 외국인투자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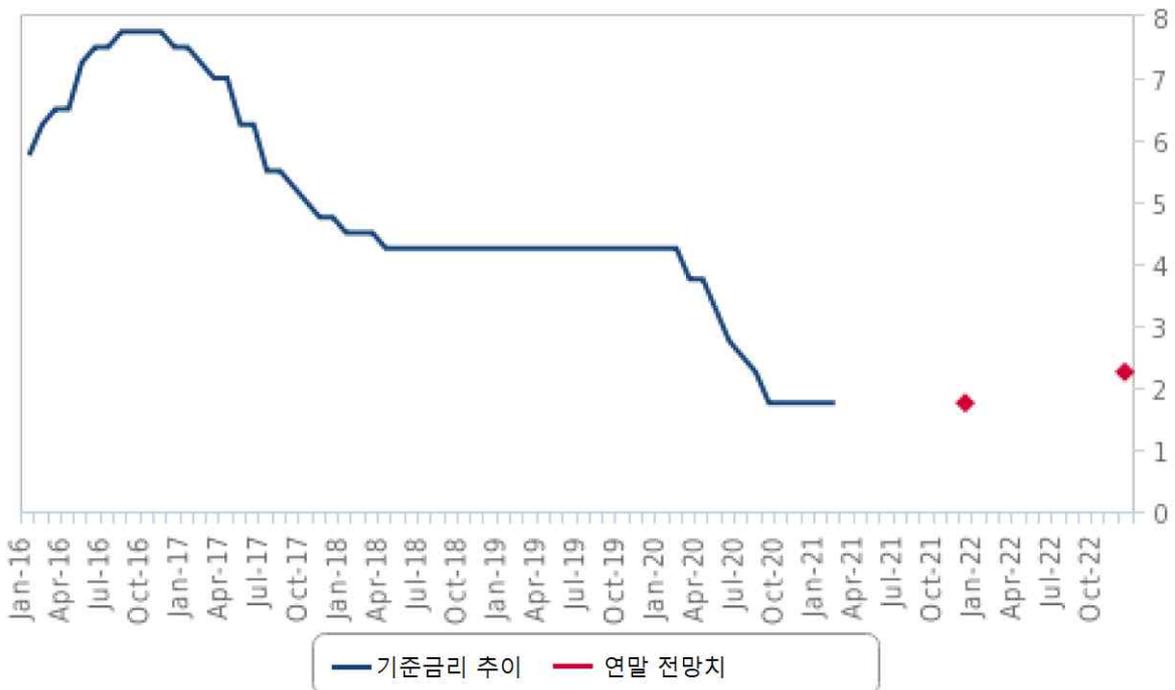
- 콜롬비아는 1990년대 경제 자유화 이후 지속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며, 시행령 2080/2000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자국 기업과 동일 법을 적용함. 특정 산업(방산, 방송산업)을 제외한 외국인의 기업 소유가 자유로움.
- 콜롬비아의 최대 기간산업인 석유 산업에서도 국영기업 Ecopetrol과 외국 기업들 간 동등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콜롬비아 GDP의 0.2%를 차지하는 R&D 부문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 보조 연구 프로그램에 차별 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 연구의 대부분은 외국 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 2020년 두케 행정부는 FDI 유입액의 급감에 대응하여 콜롬비아 투자 로드쇼(Colombia Investment Roadshow, 7월) 및 콜롬비아 투자 서밋(Colombia Investment Summit, 10월) 등을 개최하며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을 이어감.
- 콜롬비아 투자 서밋에서 플라비아 산토로 프로콜롬비아(ProColombia) 사장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니어쇼어링(Nearshoring) 유도, 레드카펫 전략(신규 투자자들 앞 제도, 법, 금융 관련 각종 조치를 포함한 패키지 제공), 투자 창구 일원화 등의 전략을 추진할 계획임을 공표함.

정책성과

내수 진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실시

- 역사적으로 콜롬비아의 통화정책은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대폭 둔화된 내수를 진작하는 것을 목표로 함. 콜롬비아 중앙은행(BanRep)은 2020년 3~9월에만 총 7차례 기준금리를 인하(4.25→1.75%)하였으며, 2021년 7월 현재까지 1.7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 BanRep에 따르면, 2021년 1분기에는 기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기세는 4월까지도 이어졌으나, 5월부터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및 전국 대규모 시위·도로봉쇄로 인해 회복세가 제한됨. 4월까지의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6%에서 6.5%로 상향 조정한 바 있으나, 2021년의 경제활동 수준은 2019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BanRep은 기준금리(1.75%) 동결을 발표하며 기존의 통화확대 기조를 유지함.
- 비록 2020년 -6.8%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BanRep은 양호한 통화정책 신뢰성을 바탕으로 2.5%p의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코로나19의 부정적 파급효과 완화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최근 콜롬비아 경제의 마이너스 아웃풋 갭(실질GDP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과 저물가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BanRep은 2021년에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됨. 2022년 말에는 2.25%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중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실시 및 향후 대 콜롬비아 투자심리 약화 등이 가시화되면,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BanRep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일찍 인상할 가능성도 있음.

콜롬비아 기준금리 추이 및 전망 (단위: %)



자료: BanRep, Fitch Solutions

정책성과

‘오렌지 경제’ 정책성과 둔화

- ‘오렌지 경제’는 두케 대통령이 미주개발은행(IDB) 자문관으로 근무할 당시(2001~13년) 출간한 저서 제목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창의적 경제를 지칭함. 두케 대통령은 2018년 8월 취임 이후 오렌지 경제 실현을 위해 수출품목의 다양화, 스마트 제조업(빅데이터, 3D프린팅,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 오렌지 지출 짜기 대출 프로그램(오렌지 경제 부문의 기업들 앞 전폭적 지원) 등을 추진해 옴.
- 콜롬비아 통계청(DANE)에 따르면, 오렌지 경제의 시장규모는 2018년 11,423백만 달러(생산원가 7,206백만 달러, 부가가치 4,217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오렌지 경제 정책을 통해 총 282,556개의 직접 일자리(전체 고용시장의 약 2.6%) 고용이 창출됨.
- 중남미의 디지털 성장을 바탕으로 오렌지 경제 산업은 향후 10년 내 콜롬비아 GDP의 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크게 위축됨. 2020년 1~9월간 오렌지 경제 부문의 수출액은 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7%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오렌지 경제 부문의 일자리 수는 517,187개에서 455,653개로 11.9% 감소함.
- 다만, 예술 및 문화유산과 문화산업 부문의 일자리가 각각 전년 대비 15.2%, 25.5% 감소한 반면, 오렌지 경제 정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창조기반 산업에서는 일자리가 전년 대비 3.4% 감소하며 비교적 낮은 감소율을 기록한 점은 긍정적임.

강력 봉쇄조치에도 코로나19 재확산

- 두케 행정부는 2020년 3월 6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7일 보건 긴급조치를 선언하고 25일부터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함. 2020년 9월 1일자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기간(약 6개월) 동안의 의무 자가격리가 해제되었으나, 2020년 말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며 2021년 1월 7일 중환자실 점유율이 높은 도시들에 한하여 통행금지 조치가 실시됨.
-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수는 4월 이후 다시 폭증하였으며, 두케 행정부의 방역 제한 조치에도 전국 대규모 시위 등의 영향으로 2021년 6월 30일 기준 콜롬비아의 신규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각각 32,376명, 664명으로 모두 세계 4위 수준을 기록하며 경기의 재위축 우려가 제기됨.
- EIU(2021. 6월)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2021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나, 글로벌 백신 공급 여력 제한, 접종 프로그램 지연 등으로 인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한편, IMF Policy Tracker(2021. 7월)에 따르면, 두케 행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긴급 대응을 위해 FOME(National Emergency Mitigation Fund)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콜롬비아 재정준칙위원회는 2021년까지 재정준칙 적용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 가용 중환자실 확보를 위한 병원 지원, 코로나19 피해 기업 앞 운영자금 지원, 특정 산업의 관세·부가가치세 감면, 저소득층의 공과금 납부 만기 연장 등의 코로나19 대응책이 실시됨. 이 같은 노력은 2021년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대규모 시위·도로봉쇄 및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두케 행정부에 막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안정

세제 개편안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지속, 대통령 지지율 최저 기록

-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가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두케 행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부가세율 인상 및 개인소득세 부과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함. 이는 GDP 대비 2% 수준의 추가 세입을 마련하여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빈곤층 대상 긴급 보조금 지원 예산 등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 개편안임.
- 그러나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동 개편안은 중산층 및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함. 결국 2021년 4월 28일부터 총파업위원회의 주도로 전국적인 노조 파업과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자 두케 대통령은 5월 2일 동 개편안을 철회하였으며, 5월 3일 카라스키야 재무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함. 레스트레포 신임 재무장관은 현재 금년 말 의회 제출을 목표로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제외한 수정 개편안을 준비 중임.

세제 개편안(2021. 4. 15자 의회 제출)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대폭 축소, 부가세율 인상(5% → 10~19%)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과대상 확대(현재 3.5백만 명 → 2025년 7백만 명), 연금소득 과세, 임시 소득세 부과
법인세	법인세율 인하(2021년), 임시 법인세 부과(2022~23년), 일부 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축소(2023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보고타사무소(2021. 5월)

-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실탄 발사 등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여 논란이 됨. 콜롬비아 인권옹부즈맨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5월 26일 기준 반정부 시위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최소 42명이 사망하고 2,00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59명이 실종됨. 이에 2021년 7월 8일 미주인권위원회(IACHR)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시위의 89%가 평화적으로 열렸으나 정부의 폭력적인 대응은 매우 과도했다고 비판함.
- 2021년 5월 10일부터 총파업위원회 대표와 10차례 이상의 면담을 이어간 결과 시위 관련 폭력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의 평화시위 보장 및 무력 행사 경찰관 조사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총파업위원회 간 협상 타결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반정부 시위와 이에 대한 무력 진압 등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지속되며 두케 행정부의 정치적 입지는 대폭 축소됨. Gallup에 따르면, 두케 대통령의 지지율은 2021년 2월 36%에서 5월 18%로 급락하였으며, 이는 콜롬비아 내 Gallup의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시작(1994년)된 이래 최저 수준임.
- EIU(2021. 6월)에 따르면, 정치적 양극화 및 사회적 불만의 고조 등으로 인해 두케 행정부의 지배력은 한층 더 감소할 것이며, 소속 정당(민주중도당, CD) 및 의회와의 갈등으로 정책 시행을 위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IHS Markit(2021. 6월)에 따르면, 금번 시위로 인해 민주중도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약해진 반면, 금융 부문의 국유화 및 석유 등 추출산업의 단계적 축소 등을 주장하고 강한 반미(anti-US) 입장을 견지하는 구스타보 페트로의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친시장적인 구조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사회안정

고질적인 빈곤과 불평등에 따른 불만 고조

- 2021년 4월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는 두케 행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촉발되었으나, 근본적으로는 콜롬비아 사회에 만연한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실제로 2019년 11월 보고타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는 불평등 심화, 치안 악화, 의료·교육제도에 대한 불만 고조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반정부 시위는 동 시위의 연장선상에 위치함.
- World Bank(2020. 10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콜롬비아의 빈곤율은 27.0%으로, 약 1,307만 명의 콜롬비아 국민들이 빈곤 하에서 생활함.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식량안보, 보건 서비스 접근성, 교육의 질 등이 위협받으면서 빈곤층의 생활수준 역시 급격히 악화됨.
- 미 국제개발처(USAID)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콜롬비아의 식량안보는 빈번한 내전과 자연재해, 베네수엘라 난민 유입,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심각하게 악화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510만 명의 국민들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 중 240만 명에게는 식량·영양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 콜롬비아의 지니계수(Gini Index, 0~100)는 2019년 51.3으로, 2017년 49.7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1992년(51.5)과 유사한 수준으로 악화되며 高불균등 상태(50 이상)에 돌입함. 또한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콜롬비아의 소득 상위 10%가 총소득의 48.6%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 하위 50%는 총소득의 12%를 차지하는 데 그침.

열악한 치안에 따른 사회적 불안 지속

-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2020 법치주의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법치지수는 세계 128개국 중 77위(중남미 30개국 중 19위)를 기록함. 정부 개방성 부문에서 세계 27위(중남미 4위), 규제 집행 부문에서 세계 56위(중남미 13위)를 기록하며 양호한 결과를 보인 반면, 질서 및 안전 부문에서는 세계 119위(중남미 28위)를 기록하며 최하위권에 머무름.
- 콜롬비아 정부는 2016년 당시 최대 반군단체였던 FARC(콜롬비아무장혁명군)와 평화협정을 맺었으나, 여전히 FARC 잔당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 2017년에는 대규모 반군인 ELN(민족해방군)과도 평화협상을 개시하였으나, ELN이 보고타의 경찰학교에서 자행한 차량폭탄 테러로 학생 22명이 사망한 뒤 협상이 중단된 바 있어 사회적 불안은 지속되고 있음.
- 한편, 2021년 6월 25일 두케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가 베네수엘라와의 국경 인근에서 총격을 받았으며, 두케 행정부는 이를 ELN과 FARC 잔당 간의 공모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음.

사회안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2021. 6월)는 ESG 요소가 콜롬비아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거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 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2개국이 2·3등급,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농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수 등 기후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석유 수출의 높은 비중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탄소전환위험(Carbon Transition Risk)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지난 20년간 빈곤 감소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소득 불평등이 꾸준히 심각한 점은 사회적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교육, 주거, 보건 및 안전, 기초서비스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다소 위험이 상존함. FARC와의 평화협정 이행, 베네수엘라 난민의 대거 유입 등에 따른 추가적인 위험은 정부 재정수지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나, 중기적으로는 투자 및 생산성 증대를 견인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법치주의, 부패 통제 등과 연관된 제도적인 틀이 준수한 편이며, 효과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중립적(2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우호적인 대미 관계 하에 코카 재배 근절 협력

- 미국 백악관 마약통제정책국(ONDCP)에 따르면,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의 코카(코카인의 원료) 재배 면적은 24만 5천 헥타르(서울시 면적의 약 4배)에 육박하며, 연간 생산 가능한 코카인의 양도 1,010톤에 달함. 이처럼 엄청난 양의 코카인은 주로 미국으로 불법 밀수되는 탓에, 미-콜롬비아 양국은 코카 재배 및 코카인 밀수 근절을 위해 우호적인 관계 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미-콜롬비아 양국은 2020년 8월 '미-콜롬비아 성장 이니셔티브'(United States-Colombia Growth Initiative, USCGI)를 출범시켰으며, 이는 마약 퇴치와 함께 치안 강화,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모델 지원 등을 병행하여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 감축과 콜롬비아의 마약 청정화("Drug-free Colombia")를 달성하고자 함.
- EIU(2021. 6월)에 따르면, 2021~23년 동안 USCGI의 활동을 위해 약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의료장비 지원 등 중국과의 협력 관계 심화

- 미국에 이어 콜롬비아의 수출입 2위 상대국인 중국은 45억 달러 규모의 보고타 지상철 1호선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경제적 교류 및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2019년 8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대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2021년 3월에는 양국 정상 간 비디오 메시지 교환을 통해 이를 재확인함.
- 2020년 5월에는 중국이 콜롬비아 앞 코로나19 관련 인공호흡기, 진단키트, 마스크 등 150만 달러 규모의 의료장비를 전폭 지원하였으며, 2021년 3월 기준 콜롬비아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중 76.6%가 중국 시노백 백신임. 이를 바탕으로 2021년 7월 11일 현재까지 콜롬비아 총 인구의 17.7%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함.
- 한편,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콜롬비아의 대중 교류 확대는 향후 대미 외교에 위함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020년 11월 두케 대통령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한편, 앞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의중임을 밝힘.

베네수엘라 불법 이주민 특별보호조치 발표

- 베네수엘라의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고조됨에 따라 약 600만 명이 이를 피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였으며, 콜롬비아는 30%인 180만여 명을 수용하고 있음. 이 중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여건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불법 이주민들의 수가 100만 명에 달함에 따라, 2021년 2월 두케 행정부는 이들에게 임시로 합법적인 체류지위를 부여하는 한시 보호법령 제정을 공표함.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불법 이주민들은 향후 10년 간 각종 사회복지 혜택의 기회를 제공받을 예정임.
- 한편, UN과 미국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와 맞닿은 국경 지대의 안전 문제는 콜롬비아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021년 3월 21일에는 베네수엘라 군 조직과 콜롬비아 FARC 잔당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보름 간 베네수엘라 군인 8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입음.

외채상환태도

증장기 위주의 외채구조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21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콜롬비아에 대한 여신잔액 48.68억 달러(단기 17.24억 달러, 중장기 31.44억 달러) 중 연체액은 25.9백만 달러로 약 0.5%에 불과하며, 총외채의 86.8%가 증장기 외채로 안정적인 외채구조를 지니고 있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4등급(2020.10)	4등급(2019.10)
Moody's	Baa2 (2020.12)	Baa2 (2019.05)
Fitch	BB+ (2021.07)	BBB- (2020.04)

세제 개편안 철회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추세

- 콜롬비아는 2006년 이후 OECD 4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취약한 산업구조 및 상품 생산 둔화 등이 잠재적 등급 하락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편, 2021년 7월 1일 Fitch는 2020~22년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공공재정 악화 전망, 높은 수준의 공적채무 및 두케 행정부의 채무 경감 여력에 대한 신뢰도 감소,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콜롬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하향 조정함.

- 콜롬비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소비 및 투자 둔화로 인해 -6.8%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21년에는 미국·중국 등의 경기 회복과 백신 접종 등의 영향으로 5% 이상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 대규모 시위의 지속 등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함.
- 가계·기업 앞 대출 지원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실시로 인해 2020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6.9%로 전년 (-2.5%) 대비 대폭 확대되었으며, 2021년에는 플러스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 부진, 코로나19 관련 보건지출 지속 등으로 인해 전년(-6.9%) 대비 더 악화될 전망이다.
-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2021년 4월 의회에 제출된 세제 개편안이 범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혔으며, 이를 둘러싼 대규모 시위 및 도로봉쇄로 인해 사망자·부상자가 속출함. 이로 인해 두케 행정부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것은 물론, 2021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던 콜롬비아 경제에 경기 재위축 우려가 제기됨. 한편,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는 공적채무 증가, 세제 개편 지연 등을 이유로 콜롬비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